

금속노조, 7월 19일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현대기아차그룹에 사회적 교섭 다시 요구...7월 19일부터 26일 '사회연대 총파업 총력투쟁 주간' 선포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금속노조의 사회적 교섭 요구를 거듭 거절함에 따라 노조가 7월 19일부터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7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사회적 교섭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현대기아차그룹사(아래 그룹사) 17개 지부·지회 조합원 200여 명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면담을 위해 본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막아섰다.



회적 교섭 거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사회연대 총파업 총력투쟁 주간'을 선포해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인다"라며 "사회적 교섭의 길을 여는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은 금속노조가 제안한 1차, 2차, 3차 제안을

비롯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오늘 허심탄회한 면담 요청마저 거부했다"라며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의 이런 태도가 국제 기업이자 한국 2위 재벌이 취할 태도인지 묻고 싶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재벌개혁 시작은 재벌이 노동조합과 대화 물꼬를 트는 것부터다"라며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그룹이 어떤 형태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7월 17일까지 조정, 중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조운동 새로운 30년 준비하자”

민주노총,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열어...8.18 태화강역 광장에 기념비 건립

민주노총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발원지 울산에서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기념하고 민주노조운동 30년을 준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과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위원회(아래 기념위)는 7월5일 울산 중구 동천실내체육관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은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간 노동현실을 대표하는 말"이라며 "비정규직, 무노조라는 반노동 체제를 깨뜨리는 투쟁이 노동자대투쟁 계승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 참여 노동자들은 "80만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회정치 투쟁, 두 번째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중심 새 사회를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기념위는 8월18일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기리는 노동기념비를 세운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단체협상 교섭결렬

6일, 20차 교섭서 결렬 선언...지부, 11일 임대 열어 단체행동 돌입 준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지부장 박유기, 아래 지부)가 7월 6일 임금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이날 개최한 20차 단체교섭에서 현대자동차 쪽에 일괄 제시를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한 건의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부는 이날 박유기 지부장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회사 측은 아직 충분한 교섭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괄 제시를 거부했다”라며 “7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쟁의발생결의, 쟁의대책위 구성, 쟁의비 특별결의’ 등 단체행동 돌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원만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조정과 협상에 임할 것” 이라면서 “회사 측이 노조 양보만 고집한다면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현대차 재벌체제 전면개혁과 현대차그룹 원하청 노조탄압에 정면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지부 노사는 지난 4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 교섭까지 요구안 전체를 세 번 읽으며 검토를 거듭했다. 현대차는 교섭 과정에서 교섭을 지연하고 교섭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27일 신차 ‘코나’ 1호차 전달식에 참석한 박성락 1공장 대표 등 지

부 간부 네 명을 전달식 4시간 뒤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이들 간부가 5월 24일과 지난달 15일 ‘코나’ 테스트차 투입을 방해하고 생산설비를 세워 기존 차량마저 생산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불법행위 노동자·시민 안전 위협

현대자동차그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처벌 촉구...“공정안전보고서 허위 작성 공무집행방해”

금속노조가 7월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공정안전제도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작성·신고한 공정안전보고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공정안

전보고서는 이 제도 시행한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무사통과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공장 안에 설치한 위험물 저장소와 폭발 위험이 있는 휘발유, 디젤유를 취급하는 공정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법으로 운영해왔다.

기아차는 화성공장 엔진 열처리 설비를 2004년부터 가동했는데 2006

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 2년 동안 위험 설비를 불법 가동한 셈이다. 기아차는 또 대규모 공장 증설, 증축 시 별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전기자동차 관련 설비 도입을 위해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공정안전보건제도 심사와 승인을 거친 뒤에 위험설비를 가동해야하나 이를 어기고 10년 동안 위험설비를 불법 가동했다.